

투데이 칼럼

갑자기 찾아오는 심장판막질환

우리 몸에서 심장은 평생 쉬지 않고 우리 몸 전신에 혈액을 보내주는 생명 펌프와 같은 역할을 한다. 갑자기 흉통이 발생하는 경우 심장질환을 의심해 보아야 하며, 심장질환 예방을 위해서라면 판막 기능을 이상이 없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판막과 판막 질환
인체의 심장은 경계가 분명히 지워진 4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방과 방 사이에는 문이 있어 한번 들어온 혈액이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작용을 한다. 바로 이 문을 심장의 판막이라 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장판막 질환이란 판막이 열리고 닫히는 작용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기능적으로 판막이 잘 열리지 않는 경우를 협착증이라 하고 반대로 열리지는 않지만 닫히지 않아 피가 역류하는 경우를 폐쇄부전증이라고 한다.

▲판막 질환의 원인
판막 질환의 원인은 태어날 때부터의 구조적 이상이 동반되는 선천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개는 정상적으로 유지되던 판막이 후천적으로 구조적인 병변이 발생해 기능 장애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판막 질환의



심 대 근
굿모닝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

흔한 원인으로 청소년 시기에 앓았던 목감기의 후유증으로 류마티스 열이라는 질환을 경험하고 난 뒤 심장 판막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다. 처음에는 고열과 피부발진 혹은 관절통으로 입원하게 되지만 증상이 호전된 후 일부 환자에서 심각한 후유증으로 심장 판막 또는 판막하 구조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판막의 손상이 초래된다. 대개 20대 혹은 그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며 특히 여성들은 임신이나 출산 전후로 심한 호흡곤란을 겪기도 한다. 이외의 원인으로는 퇴행성 질환, 세균에 의한 심내막염에 의한 이차적으로 판막이 새거나 좁아지는 경우, 매독이나 말관 증후군 등에 의한 대동맥 폐쇄부전증, 심근 경색증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승모판 폐쇄부전증, 그리고 판막의 선천적

인 기형에 의해 빠르게 진행되는 퇴행성 변화 등도 심장 판막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심장 판막 이상 증상
심장 판막에 구조적인 이상이 발생해도 곧바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는 드물다. 인체의 모든 장기가 그러하듯 심장 기능에도 여분이 많으므로 판막협착증 혹은 폐쇄부전증이 생긴 경우 심장은 그 나름대로 병적 상황에 적응해 증상 발현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보상 기전이 있다. 특히 여성들은 평소에는 모르고 지나가나 임신·출산 전후로 심한 호흡곤란을 겪으면서 판막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정도가 심해지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데 가장 흔한 증상은 호흡곤란이다. 처음에는 심한 운동이나 움직일 때만 숨이

찬 것을 느끼다가 점차 악화되면 안정 시에도 호흡이 가빠지고 똑바로 누워서 잠을 못 자게 되면서 밤을 새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기침이나 가래가 심하며 흉통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대동맥 판막 질환과 치료
대동맥 판막 질환도 승모판과 마찬가지로 협착증이나 폐쇄부전증이 생길 수 있고, 발생 시 증상도 비슷하게 나타나게 된다. 대동맥판 협착증인 경우에는 인체로 피를 보내는 가장 중요한 문이 막혀 있는 것이므로 다른 판막 이상과는 다르게 호흡 곤란의 증상과 함께 실신, 협심증 증상 혹은 급사의 위험이 더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증상의 유무에 관계없이 심초음파 검사가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대동맥 판막 질환은 불행히도 승모판 질환과 같이 치료법이 다양하지 못해 약물 치료가 아니면 대부분 판막 치환술을 받아야 한다.
판막 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수는 수술 없이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적당한 수술 시기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판막 질환이 있다고 해서 꼭 수술을 생각할 것은 아니며 담당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설
1월부터 3월까지 인구감소 4878명

청년 실업에 대한 고민이 깊어 야겠다. 요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도가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쓰고는 있기는 하다. 그래도 청년들의 생각은 다르다. 전북도가 하는 것마다 별무효과이기에 매년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저번에도 언급했지만 도내 비경제활동 인구가 2만 명이 넘는 것은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열릴 생각 해 비경제 활동 인구가 2만명인 것을 두고 그만하면 고민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할 이도 있을 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실업자는 점차 취업할 희망이라도 있지만 비경제활동자는 앞으로도 계속 무직자로 남을 공산이 크다.

명 중에 한 명만 뽑는 것으로는 청년 실업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 그 누구도 아니라고 부인할 수는 없을 터이다.
도내에 관할은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 지극 전북 탈출 러시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 호남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그 양상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4천여 명이 전북을 떠났는데 그들의 68%가 20대 젊은이라는 보고이다. 전북도가 인구 늘리기를 말할 때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인구 감소가 큰 폭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답답하고도 안타까운 일이다. 정말이지 이래서는 곤란하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와 공기업들은 진정성을 가지고 관할은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 언론 홍보용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전북도도 익히 알고 있었지만 헬 전북이라는 불만이 여전하다. 짐보따리를 싸서 전북을 탈출하는 젊은이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방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그 약발이 제대로 먹힐지 의문이다. 공무원 채용은 극히 일부만 구제시킬 뿐이기에 하는 말이다. 저번에 지방공무원의 응시율을 보니 보통 치열한 게 아니다. 그 경쟁률이 무려 25대 1이다. 스투다섯

전북도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지난 석달 동안에 4천여명의 인구가 또 줄었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겉보기로 그럴듯한 조프만 취하지 말고 팩트를 붙잡고 씨름해야 한다. 도내에는 취업을 절박처럼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다. 그들의 입장을 역지사지해야 한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할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저출산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전북도는 저출산 대책을 세워야 한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여태 진전이 없으니 하는 말이다. 대책이 이는 것처럼 말만 꺼내놓고 여태 진전이 없는 것은 저출산 문제에 방관하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잇달았다면 간헐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제다 변명을 위한 보고였지 싶다. 저출산 문제가 지역의 오랜 숙제였음에도 그동안 어떻게 해결책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여기 또다시 지적하거나 전북도의 저출산 대책이 너무 굵뜨다. 관계 전문가들과 민관협의체를 만들고 핵심과제를 선정해 그 이후에 행정력과 재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었는데 그후 성과가 어땠는지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이 다. 이것은 농작이라도 보통 농작이 아니다. 정말이지 이래로는 지역의 앞날이 어둡다. 저출산의 고착화 때문에 '네드 크로스'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이다. 사실이지 데드크로스 현상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사망자보다 출생자가 많아 맞는 데 우리 전북의 경우는 그게 아니다.

전북도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는 불만은 그 근거가 없지 않다. 전북도는 다른 광역시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수 배워야겠다. 출산 문제가 이쪽보다 덜 심각한 다른 광역시도들도 5개년 출산 정책안이며 출산 장려 추진단을 조직하는 등 출산 캠페인이 활발하다는 소식이다. 그런데 전북도는 기존 대책 그대로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비교가 된다. 전북도는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여겨선 안 된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능동적인 고민이 필요한 오늘이다.
전북도는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아이 낳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 위해 보다 차원 높은 출산 장려책을 내놓아야겠다. 전북도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2백만 도민을 운운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18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게 팩트이다. 출산 인구가 늘지 않고 있는 중에 고품화 고착 현상이 굳어지고 있는데 뭔가 보여줘야 한다. 저번에도 지적했거니와 거주 인구의 현실을 제대로 보아야 한다.

기고문

지난해 6월 정부에서 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발표됐다. 현재 국회에서는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검찰경찰개혁소위에서 수사구조개혁이 논의 중이며 국회 본 회의를 통해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됐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계속 논의가 이어져 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최종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그렇다면 수사구조개혁을 통해 가장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고 누구를 위해 수사구조개혁을 해야 하는지 그 해답을 찾아보자.
수사는 범인을 찾아내어 검거하고 증거를 수집 확보하는 활동이다. 기소란 범인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 법원에 형사처벌을 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수사구조 개혁, 혜택은 국민에게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 수사가 기소의 전 단계이므로 검사가 모두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과연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적 결합이 운명일까? 19세기 영국의 Acton경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다.
이렇듯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적 결합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권력의 견제와 균형에도 어긋나는 형태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흔히 인권선진국이라고 부르는 국가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경찰이 수



김 병 섭
무주경찰서 수사과장

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해오다가 1985년 검찰을 만들어 기소권을 넘겨줬다. 그 이유는 바로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검사는 기소기관으로서 경찰수사를 객관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국민의 인권보호와 부정부패적

결에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인권선진국에서는 인권보호 측면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김·경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찬성 응답이 반대를 월등히 앞서고 있으며 대다수 국민이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선진 형사사법 제도를 도입할 때이다.
같은 내용으로 경찰과 검찰에서 이중 수사를 받는 국민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나아가 진정한 국민의 인권을 위한 수사구조로 거듭나 그 혜택을 바로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인 것이다.

전주매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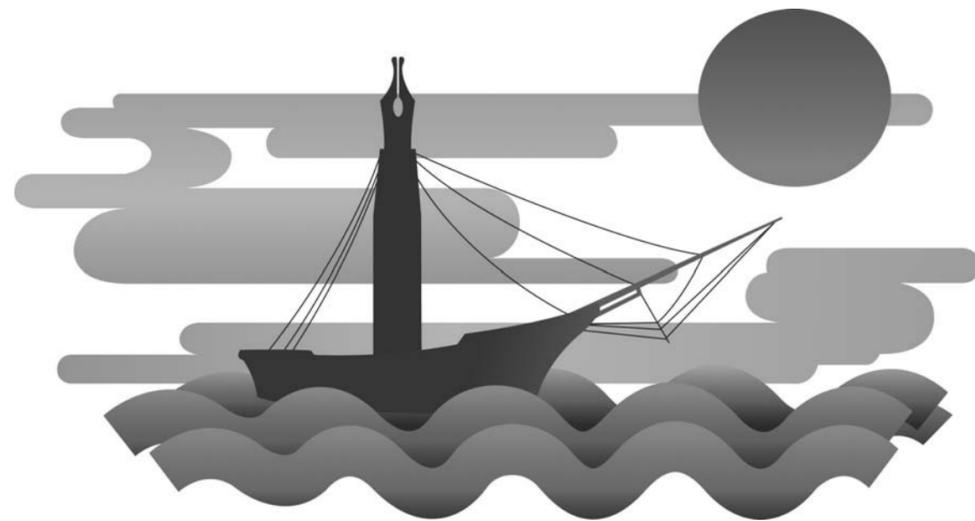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